

정책 동향

전선류 KS인증 일부 폐지

전선류 KS표시인증 품목 가운데 현재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유형과 관련 인증심사기준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평형 옥외전화선 등 10개종의 KS전선류는 단종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에 의거한 전선류 KS심의에서 현재 제조 및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품목 10개종에 대해 KS표시인증 취소와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한다고

통보했다.

이번에 폐지된 KS인증 전선류 및 인증심사기준 대상은 ▲실리콘 바니시 유리첸 ▲바니시 유리첸 테이프 ▲전기절연용 끝손질 바니시 ▲공업용 단자대 ▲글래스 권동선 ▲이중유리 섬유절연 평각동선 ▲2중 면권 평각동선 ▲평형 옥외전화선 ▲케임브릭 절연전선 ▲텔레비전 수신용 피더코드 등이다.

조달청, 부패방지대책 강화

조달청은 조달품목에 대한 검사업무를 전문검사기관이 대행하도록 개선하는 등 부패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조달청은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검사업무를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전문검사기관을 지정, 수요기관의 공무원이 검사업무를 수행치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전자입찰 이용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범정부적인 단일창구를

마련, 기업이 한 곳에서 모든 공공기관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간의 상호 비교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청렴서약 음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시설공사계약업무전반에 대한 감시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하며 시설공사 전자계약제를 시행, 계약서작성과정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정책 동향

이와함께 공중별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 하여 계약 이행 능력이 없거나 부실

공사등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입찰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산업현장에 제조기술센터 운영

핵심기술분야별 세계일류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술현장에 250개 상당의 제조기술연구센터가 지정, 운영된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8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최된 '대덕밸리 연구기관장 기술혁신 간담회'에서 세계적인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250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선정, 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하고 기술개발 자금과 장비구축 등을 중점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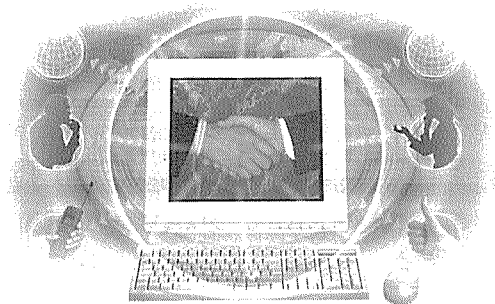
이같은 방침은 무역부문의 세계일류상품 500개 발굴계획에 이은 것이어서 산업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전략으로 주목된다.

산자부는 이와관련, 전국 8천개 기업부설 연구소 중 특화전문분야에 있어 세계일류수준의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연구소를 선정, 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하고 5년간 1개소당 20억원상당의 기술개발 자금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제조기술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까지 연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현장연구인력의 사기진작과 우수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장관은 이와 함께 현재 작성중인 2010년 산업발전 로드맵에 따라 핵심기술개발과제를 도출, 중장기 기술개발자금을 집중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공통핵심 애로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연중수시로 자유응모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장관은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기술개발사업 연구비중 인건비 반영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상향조정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말했다.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최대 5년

산자부는 전력신기술의 보호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산자부장관이 정할수 있도록 보호기간을 완화하는 등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지난 7월 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법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사 및 감리원이 최초로 면허증 또는 감리원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산자부장관이 실시하는 당해 실무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했다.

또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 또는 경력확인도 산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설계사 면허를 통합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해 자체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리원배치현황을 산자부장관에 신고토록 해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기술실명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사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했다.

그밖에 설계·감리용역의 집행계획공고는 발주

기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입찰공고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고, 신기술개발자 보호 차원에서 신기술개발자가 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의 범위도 정했다.

무엇보다 설계업자·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발주자가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용역업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또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신고에 따른 세부절차 등을 정하고, 양도·양수 및 합병신고를 수리한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협회에 통보하도록 했고, 신기술의 지정신청 및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 등에 따른 수수료의 상한범위를 정해 수수료의 과도한 책정 등 부작용을 방지토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기술의 지정·보호방법, 설계업자·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손해배상제도,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 동향

사이버 수출상담장 운영

인터넷을 통한 수출마케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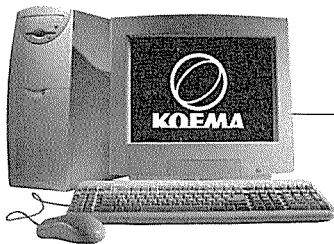
산업자원부는 월드컵 이후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최대한 활용, 인터넷을 통한 수출마케팅을 적극 추진키로하고 우선 8월에 KOTRA 본사와 국내외 무역관에 사이버 상설 수출상담장 40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업체는 자사제품소개를 위한 3차원 카탈로그 제작비 등 일정 실비만 부담하면 해외 무역관을 통해 미리 매칭된 바이어를 상대로 상담

이 가능하게되고 필요시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또 상담장의 설치 운영과 동시에 해외 바이어의 관심사항, 시차 등을 고려해 기간별 테마를 설정해 보다 특화된 품목별 또는 지역별 사이버 수출상담회를 올해안에 일본과 뉴욕 등에서 두번 개최해 상담 효율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기존 개별 마켓플레이스의 기능을 통합, 개선해 수출유망기업에게 전문적 지원이 가능한 e-무역상사 설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e-무역상사는 내년 추진예정인 중소기업 인터넷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ttp://www.koema.or.kr>

